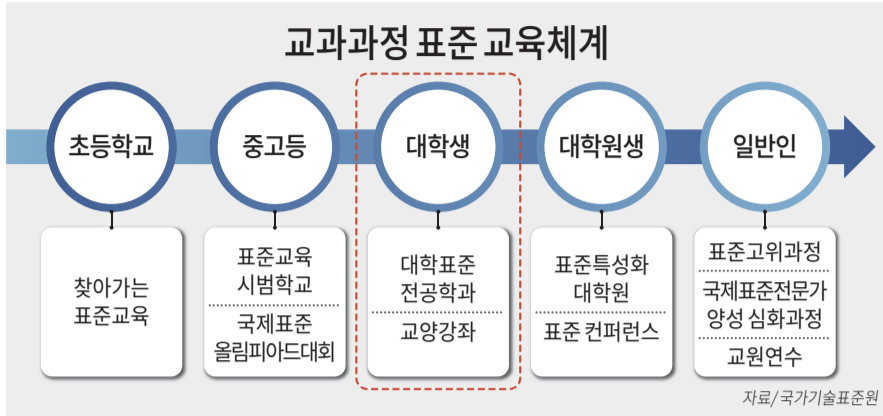


국내 최초 개설된 고려대 '표준학과', 첫 신입생 맞아

정시모집에 8대 1 경쟁률 기록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 인재 양성 위한 체계적 교육”
3개 대학 '표준 특성화 대학원' 운영



국내 대학 학부에 처음으로 표준 전 공이 개설돼 첫 신입생이 입학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고려대학교는 1일 국내 최초로 신설된 고려대 세종캠퍼스 '표준·지식학과'에 2023년도 신입생 20명이 입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시모집에서 '표준·지식학과'는 8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표원은 “표준 인재 양상을 위해 체

계적인 대학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년부터 고려대에 교과목 개발, 교재 발굴 등 교과 과정 개발을 지원해 표준 전공 학사과정 개설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표준과 지식 관련 기초교육에서부터 시험·인증 실무과정, 기술 창업 교육까지 표준·지식 분야 종합 인

재를 양성하는게 목표다. 표준을 직접 작성해 보고, 시험·인증에 적용해 보는 한편, 나아가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 역량까지 교육할 예정이다. 또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창업 교육도 수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학사과정 외에도 초·중·고생부터 일반인까지 전체 교과 과정에 대한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연간 200여 개의 초·중·고를 직접 방문하거나 디지털 교재 보급 등을 통해 '찾아가는 표준교육'을 실시한다. 2019년부터는 고려대, 부산대, 중앙

대 등 3개 대학에 '표준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을 지원 중이다. 또 기업 활동에 표준 활용 및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중앙대에서 기업 임원,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표준 고위과정'을 운영한다. 진중욱 국표원장은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국가표준의 미래를 이끌 표준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 전문인력이 지속 보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조·건설업서 일하면 1200만원 목돈 뚝딱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5~49인 사업장 취업 2만명 지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12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뉴시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12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등 공금 적립금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적립금이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이 축소돼 각각 400만원으로 조정됐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7만명보다 줄어든 2만명이다.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제한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부담을 합리화해 더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 대상 타 부처의 자산 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간 동시 가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신규청년도약계획',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입 요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 해지되도

소상공인·상점·온라인 '동네'로 뭉친다

지자체와 컨소시엄 구성해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달 24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은 지역 내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그 상품을 판매·체험할 수 있는 동네상점 및 온라인 판매채널을 연결해 지역 내 유통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2개 지역으로 지자체와 컨소시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프라 등 소상공인 지원 자체역량 또는 연계가 가능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관·기업·단체 등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6억원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는 국비의 20% 이상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산자(상품) 발굴·상품화 지원 ▲동네상점 발굴·체험형 공간구축 ▲지역 내외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교육·컨설팅 및 성과확산 홍보 등이다. /김승호 기자

체와 운영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프라 등 소상공인 지원 자체역량 또는 연계가 가능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관·기업·단체 등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6억원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는 국비의 20% 이상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산자(상품) 발굴·상품화 지원 ▲동네상점 발굴·체험형 공간구축 ▲지역 내외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교육·컨설팅 및 성과확산 홍보 등이다.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 재기 위해 고용보험료 50억 지원

중기부, 예산 늘려 2.5만명 혜택
부산 해운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성모씨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던 중 경영악화로 가게를 접어야 했다. 성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덕에 지난해 9월부터 430만원의 실업급여와 300만원의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받으며 현재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다.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예산(36억3000만원)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올해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소상공인에서 또

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1대1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실제 사례들을 수집·제공해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진공 누리집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경영 애로 집중 발굴 관련 부처 공유·해결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과감한 투자를 이끌기 위해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본격 출범했다. 1일 중견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핫라인' 역할을 위해 꾸린 전담반은 지난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일환으로 설치한 중견기업 전용 패스트트랙이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투자활동을 막는 신산업, 환경, 입지 등 덩어리 규제와 경영 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내 일자리 정보 'AI잡케어'가 찾아준다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진로탐색 등 빅데이터 정보 제공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원하는 일자리를 검색하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 관련 일자리와 필요한 채용 서류, 면접 절차, 직무역량 등을 찾아주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JobCare) 서비스'가 출시된다. 정부는 향후 대화형 AI인 챗GPT를 해당 서비스에 접목해 보다 양질의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2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총 480개 취업알선기관의 상담 직원들만 구직자 상담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구직자 스스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새 서비스를 개발,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서비스 메뉴는 '내 직무역량', '취업 시장정보', '추천정보' 등 6가지로 구성돼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이용자가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면 잡케어가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 1900만건, 구인공고 580만건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세종=원승일 기자